보이스피싱 합수단, 재수사로 범죄수익 1억3630만원 몰수

대법원, 범죄수익금 1억3630만원 몰수 파기환송
"압수 현금, 어떤 범행으로 취득한지 특정 안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반환될 뻔했던 범죄수익금 1억3630만원이 검찰 추가 수사로 국고에 귀속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기죄 혐의를 받는 A(35)씨와 B(39)씨의 범죄수익금 1억3630만원에 대한 몰수 판결이 지난달 30일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서 보따리상에게 면세품을 구입하는 척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중국 계좌로 송금받아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께 A씨와 B씨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1억9600만원 피해 사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1억3630만원도 압수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1억3630만원에 대해서도 몰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현금 몰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한정된다"며 "압수된 현금이 기소된 사기 사건의 피해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어떤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합수단은 파기환송된 사건 재수사에 착수,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지시책, 환전책 등 총 17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합수단은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사기 범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활용,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차 기소했다.

또한 압수한 현금 1억3630만원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했다.

압수된 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의 피해금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범죄집단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이상 국고귀속 목적의 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합수단은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3명(피해액 7600만원)을 추가 발견해 이들에 대해 사기죄도 추가 기소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지난달 22일 A씨와 B씨에게 다시 각각 징역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현금 1억3630만원에 대한 몰수 판결도 내렸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피해를 회복시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B마트 앞에서 열린 '배달의 민족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배달플랫폼노조 남서울지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모습 드러낸 '강남 납치·살해' 일당…질문엔 묵묵부답

지난달 29일 피해자 차량으로 납치·살해

피해자의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노리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35)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전 9시34분께부터 차례로 서울 수서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검은 후드티를 뒤집어쓴 채 가장 먼저 정문으로 나온 황모(36)씨는 '왜 납치·살해했는지',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유가족에게 할 말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분 간격을 두고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 연모(30)씨와 이씨도 아무런 답변을 타지 않은 채 차량에 올랐다.

이들은 각각 다른 호송차에 탑승해 법원으로 이동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와 연씨는 각각 주류회사 직원과 무직으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답하지 않았는데,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황씨와 연씨에게 범행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코인(가상화폐)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청부살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A씨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경찰은 범행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연씨와 황씨를 경기 성남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논현동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대청댐 인근을 수색해 사건 발생 41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5시35분께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일당의 신상공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 공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인형 줄게" 초등학생 집에 데려가려 한 40대 입건

주변 시민들 경찰에 신고

초등학생에게 "인형을 주겠다"며 접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꾀어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15분께 광주 북구 한 어린이공원에서 8살 난 초등학생 B양에 접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양에게 간식을 준 뒤 "삼촌 집에 있는 인형을 주겠다"며 500m 가량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시민들은 취객이 B양을 데려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B양의 삼촌이라며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선옥 기자